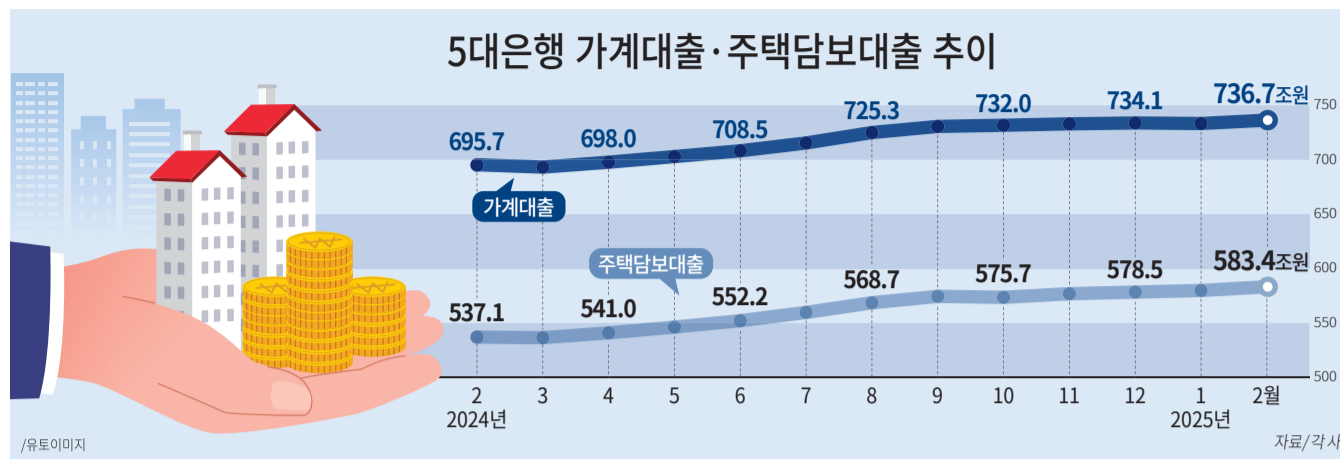


가계대출 다시 증가... 주택수요 회복에 주담대 3.4조 '깡충'

5대은행 가계부채 잔액 736.7조 주담대 중심... 전달 대비 3조 늘어 신용대출 잔액은 3개월 연속 줄어 "금리 내리고 3단계 DSR 도입 전 수요 확대 예상... 모니터링 강화"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지난달 3조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주택 수요 등 대출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대출 금리 인하 압박이 더해지며 수요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선 대출을 조여야 하지만 대출 수요는 늘고 있어 은행들이 대출을 늘리지도, 줄이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4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부채 잔액은 736조7519억원으로 집계됐다. 한달 전과 비교해 3조931억원



늘었다. 지난 1월 가계대출은 10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감소 전환 한 달 만에 다시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늘었다. 5대 은행의 주택관련 대출 잔액은 583조3606억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3조3835억원 증가했다. 전달 증가폭(1조5136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반면 신용대출은 지난해 12월부터 3

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신용 대출 잔액은 101조9589억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493억원 줄었다.

가계대출이 늘어난 요인으로는 억눌렸던 부동산 수요가 대출로 이어진 영향이 컸다. 지난해 8월 이후 은행들은 폭증한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대출 요건을 강화하고 금리를 인상했다. 올해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을 초기화하면서 대출 문턱이 낮아져 주택구매부터 밀렸던 이

사 수요까지 늘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12일 서울시가 서울 강남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점도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송파구 아파트값은 지난 2월 1.22% 올랐다. 지난 1월(0.17%)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강남구(0.01%→0.76%)와 서초구(0.08%→0.61%)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를 중심으로 매매가

격이 오르며 대출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고민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선 월·분기별 대출 공급을 제한해야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와 금융당국의 대출 금리 인하 압박, 정부정책 등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 금리를 낮추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8일 주택담보대출 5년 변동(주기형) 대출의 가산금리를 0.25%포인트(p) 낮췄다. 농협은행은 오는 6일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주기형 상품을 0.2%p, 변동형 상품을 0.3%p 인하한다.

A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대출금리를 높여 가계부채를 관리했는데, 올해 부동산 정책에 따르면 송파구 아파트값은 지난 2월 1.22% 올랐다. 지난 1월(0.17%)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강남구(0.01%→0.76%)와 서초구(0.08%→0.61%)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를 중심으로 매매가

트럼프發 관세전쟁에 투심 위축 '암호화폐 급락'

비트코인 가격 하루만에 9.30% ↓ 트럼프 "가상자산 전략비축" 발언 특정 암호화폐 보유자 혜택 지적도 이더리움, 6개월 만에 최저가 기록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암호화폐 비축 선언으로 급등했던 암호화폐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트럼프 발(發) '관세 전쟁' 우려에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다.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암호화폐 비축 발언이 일부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암호화폐)에 혜택을 주기 위한 발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4일 암호화폐 시장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후 1시 기준 1BTC당 8만4111달러(1억2280만원)에 거래됐다. 하루 전보다 9.30% 급락했다. 같은 시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코인 가격도 전일보다 약 840만원(6.15%) 내린 1BTC당 1억2680만원을 기록했다.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한 것은 트럼

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3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유예 조치를 중단하고, 오는 4일부터 모든 물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수출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 관세'도 오는 4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언급했다.

한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중국과의 관세 이슈가 재부상하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 확산에 대한 우려에 가상화폐 시장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트럼프의 암호화폐 비축 발언이 특정 암호화폐 보유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상승했던 가격을 되돌리는 이유다.

지난 2일(현지시간) 트럼프는 SNS를 통해 "암호화폐 비축은 지난 수년간의 바

이든 정권 동안 위기에 빠진 (암호화폐)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내가 디지털 자산에 관한 행정명령을 통해 실무 그룹에 가상 자산 전략 비축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이유"라고 언급했다.

전략 비축 대상으로는 XRP(리플), SOL(솔라나), ADA(카르다노)를 지목했다. 이어 암호화폐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BTC)과 2위인 이더리움(ETH)도 비축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비축 선언 직후 2시간 만에 솔라나는 26.6%, 리플은 32.2%, 카르다노는 72.3%의 상승을 기록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각각 11%, 14.6% 올랐다.

특정 암호화폐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비축 발언이 특정 알트코인 보유자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상승했던 암호화폐 가격도 곧이어 하락 전환했다.

4일 기준 솔라나, 리플, 카르다노는

트럼프의 발언 직전과 비슷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지난해 9월 초 이후 6개월 만에 최저가를 기록했다.

비트코인 낙관론자인 샘슨 모우 JAN3 대표이사는 "(특정 암호화폐를 직접 언급했다) 트럼프가 비축 화폐를 직접 선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며 "(비축에 앞서)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미국이 금융 중심지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가 지시한다고 해서 곧 그것이 실행될 것인 의미는 아니다"라며 "이러한 언급은 특정 알트코인이 비축 대상에 포함되기를 원하는 로비스트들을 달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닉 퍼크린 코인 뷰로 창립자도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발표는 단기적인 상승을 유도한 요인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건설현장 2.2만 곳 연말까지 집중점검

국토부, 부실시공 방지 일환 실시

정부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전국 건설현장 2만2000곳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방지와 품질 확보,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해 올해 한 해 동안 전국 2만2000개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점검기간은 이날부터 연말까지다. 국토교통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해 12개 기관과 함께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취약시기 정기점검과 사망 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총 2만2871개소 현장을 점검해 4만8772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과태료와 부실 벌점이 각각 156건, 162건이며, 시정명령 등도 내려졌다.

안전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점검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연중 상시점검을 실시한다.

관계기관과 특별합동점검도 확대해 부실시공이나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지난달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의 이행 상황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시 감리·시공사·점검자가 직접 비계에 올라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보호구의 지급·착용여부도 중점 점검하는 등 현장의 부실시공과 안전 확보 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추락사고가 발생한 시공사는 본사 차원에서 전 현장을 자체점검해 점검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한다. 이를 검토해 미흡한 현장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안성미 기자 smahn1@

美, 캐나다·멕시코에 25% 신규관세 발효

중국산 제품 10% 추가관세도 부과 내달 2일 '상호관세' 예정대로 시행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드디어 불이 붙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공언해온대로 트럼프행정부는 4일(현지시간) 오전 0시 1분부터 캐나다·멕시코 제품에 대한 25%의 신규 관세를 발효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의 추가 관세도 4일을 기해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상호관세 역시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거듭 확인했다. 아울러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도 4월 2일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새롭게 예고했다. 국가나 품목을 가리지 않고 관세폭탄을 떨어뜨리는 형국이다.

특히 캐나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으로서 미국동맹국이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임에도 신규 관세 부과 대상이 됐다는 사실은 한국에도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입장에서 면밀한 대비책이 요구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3일 오후 서명했다. 이번 관세로 인해 미국보다 생산원가가 저렴한 멕

시코에 진출한 뒤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이용해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해 온 한국 기업들에게도 일정한 타격이 예상된다.

현재 한국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 LG전자,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트랜시스 등 400여개 기업이 멕시코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다.

캐나다는 25% 관세 발효 직전, 대미 '보복 관세'를 예고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3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관세가 발효되는 4일부터 캐나다도 300억 캐나다 달러(약 30조원)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25%의 보복관세를



3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연설하고 있다. /뉴시스

부과할 것이며, 21일 이내에 1250억 캐나다 달러(약 125조원)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보복 관세가 추가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호 기자 kmh@